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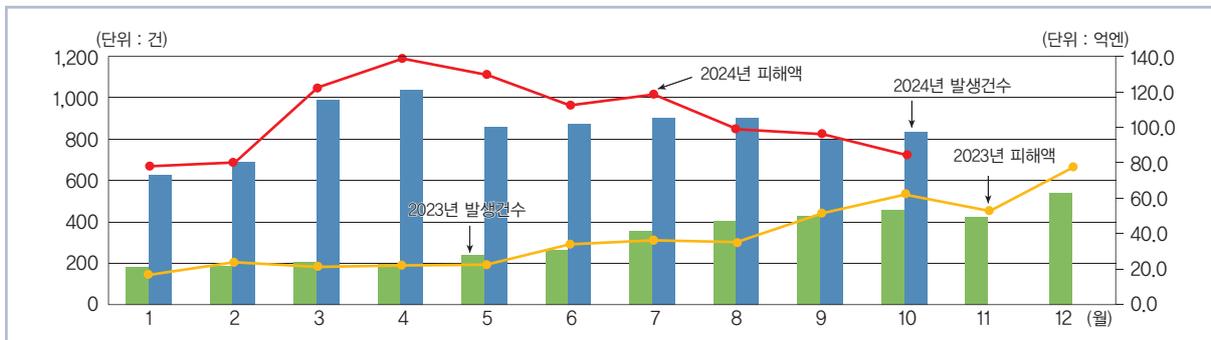
# 일본 정부의 계좌 부정이용 방지대책과 시사점

이병관 부장대우 | 02-3705-6336

SNS를 통한 투자·로맨스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법인계좌를 포함한 예금 계좌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함. 이번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이 부정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정이용 방지와 실태파악 강화, 이용자의 접속환경과 거래 특성에 근거한 다층적 탐지, 탐지시나리오 및 기준의 개선, 금융기관간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됨.

- SNS를 통한 투자사기와 로맨스사기 등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법인계좌를 포함한 예·저금 계좌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화 방안(法人口座を含む預貯金口座の不正利用等防止に向けた対策の一層の強化について)』을 발표함.
-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10월중 SNS형 투자·로맨스사기 피해액은 약 1,059.1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734.4억엔 늘어났으며, 인터넷뱅킹 관련 부정송금 피해액은 2023년중 약 87.3억엔(전년대비 약 5.7배)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 로맨스사기(romance scam)는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얻은 후 그들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용사기의 일종임.

<그림 1> 일본의 SNS형 투자·로맨스사기 발생 현황



주 : 발생건수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건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일본 경찰청(2024)

- 이와 관련하여 금융청은 올해 7월 기존의 자금세탁·테러자금공여대책기획실을 개편하는 형태로 종합정책국 산하 리스크분석총괄과 안에 금융범죄대책실을 새롭게 설치하였음.
  - 이는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대응뿐 아니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범죄 피해방지에도 역점을 둔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함.
  
- SNS형 투자·로맨스사기에서 1건당 피해액이 1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인계좌가 매매 또는 부정송금에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함.
  - 이는 법인계좌의 경우 개인계좌에 비해 이체한도액이 고액이거나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의 상거래와 관련한 결제·송금과 부정한 입출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곤란해 금융기관이나 수사당국이 사기 피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함.
  
- 다수의 법인계좌를 악용한 자금세탁사건에서는 SNS 상에서 모집한 협력자에게 법인 등록과 계좌개설을 지시하고, 계좌개설 시를 대비하여 금융기관 예상문답집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짐.
  - 대표적인 사건이 리바톤그룹(Rivaton Group)이라 불리는 범죄조직이 137개 금융기관에 1,367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약 700억엔의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한 건임.
  - 법인 자체가 정식 절차를 통해 설립되었음을 감안하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부정한 목적을 간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이 부정한 거래를 모니터링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함(<표 1> 참조).
  - ① 계좌 개설 시 부정이용 방지 및 실태파악 강화, ② 이용자측의 접속환경이나 거래의 금액 빈도 타당성에 근거한 다층적 탐지, ③ 부정의 용도나 범행의 기법을 감안한 탐지 시나리오 및 기준치의 충실·정밀화, ④ 탐지 및 사후의 고객 확인, 출금정지·동결·해약 등의 조치 신속화, ⑤ 금융기관간 정보 공유, ⑥ 경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강화 등임.

<표 1> 예·저금계좌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강화방안

<p><b>① 계좌개설 시 부정이용 방지 및 실태파악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거래가 범죄이며, 금융기관으로서 엄격히 대응할 방침임을 고객에게 주지</li> <li>● 본인확인 과정에서 제시된 본인확인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li> <li>● 의심스러운 거래나 경찰로부터의 동결의뢰 등 계좌의 부정이용 리스크가 높은 고객의 속성·경향을 조사 분석</li> <li>● 한 고객에게 복수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 이용목적 확인과 이용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li> </ul>
<p><b>② 이용자측의 접속환경이나 거래의 금액·빈도 타당성에 주목한 다층적인 탐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이용이 확인된 계좌와 동일한 단말기·접속환경에 대한 탐지</li> <li>● 고객의 신고정보나 과거 접속정보와 정합하지 않은 접속 탐지</li> <li>● 계좌개설 시 심사에서 파악한 고객의 실태, 계좌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의 탐지</li> </ul>
<p><b>③ 부정의 용도나 범행의 기법에 주목한 탐지시나리오 및 기준치의 충실·정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의 부정이용 리스크가 높은 고객에 대한 고유 시나리오 적용</li> <li>●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피해에 특유의 입출금·송금 패턴에 주목한 시나리오 적용</li> <li>● 부정이용 발생상황이나 사기사례의 지속적인 조사·분석, 신속한 시나리오·기준치의 조정</li> </ul>
<p><b>④ 탐지 및 사후의 고객 확인, 출금정지·동결·해약 등의 조치 신속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의 부정이용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빈도·즉시성을 높인 조기 부정거래 탐지</li> <li>● 탐지한 거래의 의심 정도에 따른 대응 내용의 세분화와 신속한 조치 (부정을 확정한 경우) 리스크 차단 조치 (사절·동결·입출금정지 등) (부정을 확증하지 못한 경우) 리스크 저감 조치 (거래의 일시보류·고객의 연락수단 확인 등)</li> <li>● 거래제한 등을 해야 할 판단기준, 판단프로세스, 필요한 고객 확인사항 등의 명확화 (특히 계좌개설 후 조기에 부정이용이 많은 경우) 개설 후 일정기간의 거래 종류 및 금액 등의 제한</li> <li>● 야간·휴일에도 신속하게 거래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li> </ul>
<p><b>⑤ 부정 등의 단서·실태파악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간 정보 공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의 부정이용 기업이나 대응사례 등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와 대응능력 향상</li> </ul>
<p><b>⑥ 경찰에 대한 정보제공·연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우려가 높은 거래를 탐지한 경우 지역 경찰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이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li> <li>● 지역 경찰의 협력 의뢰에 적절한 대응</li> </ul>

자료 : 일본 금융청

■ 금융기관의 규모나 입지에 관계없이 계좌의 부정이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된 6가지 대응방안은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임.

- 범죄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이용 대상 계좌는 계좌개설이 용이하고 입출금 거래를 실행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의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음.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금계좌를 동결하지만, 경찰 등 외부의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계좌를 동결하는 금융기관도 적지 않음.
- 고객을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이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평판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융범죄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KIF**

<자료>

1. 金融財政事情, 『金融機関に求める預貯金口座の不正利用等防止に向けた対策』, 2024.11.26.
2. 警察庁, 『令和6年10月末におけるSNS型投資・ロマンス詐欺の認知・検挙状況等について』, 2024.12.3.